산업통상자원부

보 도 자 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3. 2. 2.(목) 11:00 < 2.3.(금) 조간 >	배포 일시	2023. 2. 2.(목)
담당 부서 <총괄>	통상정책국 구주통상과	책임자	과 장 이상헌 (044-203-5660)
		담당자	사무관 정다연 (044-203-5666)

유럽연합(EU) 통상현안 지휘 본부 가동

– 유럽연합 현안 종합 분석·대응을 위한 「유럽연합통상현안대책단」 출범 –

□ **산업통상자원부**(이하 산업부, 장관 : 이창양)는 **2월 2일(목)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**로 **「EU통상현안대책단」 출범회의**를 개최하고, 이어서 제1차 **「범부처 EU CBAM 대응 TF」 회의를 진행**하였다.

< 행사 개요 >

[EU통상현안대책단 출범회의]

◇ **일시/장소** : '23. 2. 2(목) 14:00-15:30 / 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
◇ **참석자** : 총 17명
- (정부)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(주재), 통상차관보, 기재부, 환경부, 외교부
- (유관기관/연구소) KOTRA, 대한상회, 무역협회, 산업연구원, 대외경제정책연구원, 에너지경제연구원, 유럽학회
- (업종) 자동차협회, 철강협회, 반도체협회,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, 전지협회

[범부처 EU CBAM 대응 TF 출범회의]

◇ **일시/장소** : '23. 2. 2(목) 15:30-16:30 / 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
◇ **참석자** : 총 10명
-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(주재), 국조실(탄소중립위원회), 기재부, 환경부, 외교부, 중기부

EU통상현안대책단

□ EU통상현안대책단은 **EU 주요법안들에 대해 관계부처 및 산·학·연 전문가가 참여**하여 **입법안에 대한 진행경과를 공유**하고, **우리 업계 영향을 평가하고 지원하는 종합적 컨트롤타워**로서 구성·출범하였다.

□ 우리정부는 EU와 한-EU FTA 무역위원회 등의 협의체 등의 계기에 **EU와 양자 현안 및 글로벌 도전 과제에서 긴밀히 협력·대응** 해오고 있으나,

○ 전세계적으로 미-중경쟁, 자국중심 산업정책이 확산되며 최근 **EU에서도 美IRA 대응 및 역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안을 마련·추진***중인바, **이슈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국내적으로 EU 현안에 대한 종합 대응창구 마련 필요성이 대두**되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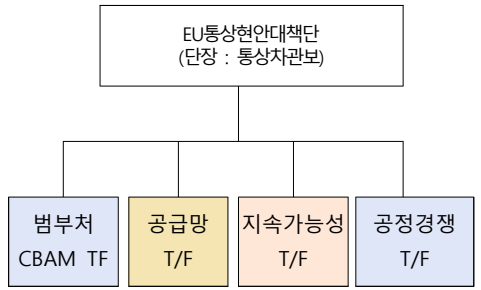
* 반도체법, 배터리법, 기후중립산업법
* EU 집행위원장은 미국IRA에 대응하여 기후중립산업법 제정 등을 언급('23.1.17)

□ 오늘 출범회의를 시작으로 **EU통상현안대책단(단장: 통상차관보)은 정부와 산·학·연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*로 구성**되어 **분기별로 1회씩 이슈별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**이며,

○ 대책단 아래 **CBAM, 공급망, 지속가능성, 공정경쟁 4개 T/F를 설치하고 법안 진행사항과 연계 개최**, 우리 영향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**對EU 협의를 지속**해나가는 한편,

○ **우리 기업의 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**하고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나갈 계획이다.

< EU통상현안대책단 구성 >



- 정부 : 산업부 **통상차관보(단장)**, 기재부, 외교부, 환경부 등
- 유관기관 : 무역협회, KOTRA, 대한상의
- 협회 : 자동차협회, 철강협회, 반도체협회,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, 전지협회
- 연구원 : 산업연구원, 대외경제정책연구원, 에너지경제연구원, 유럽학회

※ T/F 산하에 이슈별 워킹그룹도 구성하여 필요시 탄력적으로 운영 예정

□ **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**은 "오늘 출범한 **EU통상현안대책단을 통해 앞으로 對EU 통상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**나가고, **우리 업계의 부담요인과 기회요인을 도출하여 對EU 수출활력 제고**와 **우리기업 대응역량을 강화해나가는 기회**가 되길 기대한다" 고 언급하였다.

범부처 EU CBAM 대응 TF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EU통상현안대책단 회의에 이어, **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**로 국조실, 기재부, 외교부, 환경부, 중기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**『범부처 EU CBAM**(탄소국경조정제도) **대응 TF』**을 본격 출범하였다.

□ **범부처 EU CBAM 대응 TF**는 **제30차 통상추진위원회**(11.2) 및 **제231차 대외경제장관회의**(12.26)를 통해 EU CBAM 합의안 발표시 **기존 관계부처 회의를 확대·개편***하여 **구체적인 대응계획을 마련**하고 **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조하며 대응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신설**된 것이며,

* 산업부(신통상전략실장 주재), 국조실(탄중위), 기재부, 외교부, 환경부, 중기부 참여
- 총 5회 개최('21.7/8, '22.10/11/12) : 정부의견서 제출, 업계 지원방안 등 논의
** 산업부는 EU CBAM 법안 초안 발표('21.7) 이후 철강업계와 「CBAM 대응협의체」 회의 개최(총 25회)

○ 작년 12.18일 EU측이 CBAM 도입에 공식 합의하고 올해 10월부터 전환기간 시행을 예고함에 따라 ①**각 부처별 CBAM 대응 방안을 점검·조율**하고 ② **부처 간 협업을 강화**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**對EU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**으로 구성되었다.

□ 금일 회의를 주재한 **산업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**은 "EU CBAM 뿐만 아니라 미-EU간 GSSA* 논의 등 주요국가들이 **산업계의 탄소감축을 유도**하기 위해 **새로운 통상 정책·규범들을 도입**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관련 제도들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련국들과 **협의를 강화**하는 한편, **기술개발 및 대응역량 강화**를 통해 **다른 국가들보다 먼저 수출경쟁력을 확보**해 **위기를 기회로 전환**해야 한다" 고 강조하였다.

* GSSA(Global Sustainable Steel Arrangements): 철강, 알루미늄 산업의 탄소저감과 과잉 공급 대응을 목표로 미-EU간 '21.10월 논의 개시('23.10월 타결 목표)

○ 이와 관련, **「범부처 EU CBAM 대응 TF」를 가동**하여 **철강 등 EU CBAM 대상 업종의 탄소저감 기술개발 지원**과 **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·검증·보고 관련 국내 인프라 구축**을 위해 **부처간 긴밀히 협조**할 것을 당부하였다.

□ 금일 TF 회의 참석자들은 **EU CBAM** 뿐만 아니라 **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탄소무역장벽**에 대한 움직임을 **지속 모니터링**하고, 앞으로 **각 부처간 역할과 협업**을 한층 강화해 우리 기업들의 **수출경쟁력을 유지**해 나갈 수 있도록 **총력 대응하자는데 뜻을 같이**하였다.

□ 향후 **「범부처 EU CBAM 대응 TF」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**함으로써 **부처별 수출기업 지원 계획** 및 **이행현황을 점검**할 계획이다.

○ 아울러 CBAM 본격 시행시 예상되는 **수출기업의 애로사항과 대응 과제**들을 의제로 상정하여 관련 **소관부처와 함께 이를 논의함으로써 향후 수출기업의 애로를 실효적으로 해소할 방안을 마련**해 나갈 예정이다.

【참고】 1. EU통상현안대책단 출범회의 개최개요
2. EU 통상 주요법안 동향 및 대응계획

담당 부서 <총괄>	통상정책국 구주통상과	책임자	과 장 이상헌 (044-203-5660)
		담당자	사무관 정다연 (044-203-5666)
	통상정책국 기후에너지통상과	책임자	과 장 윤진영 (044-203-4890)
		담당자	사무관 김혜림 (044-203-4891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고1 EU통상현안대책단 출범회의 개최 개요

□ **개요**

○ **(일시/장소)** 2.2일(木) 14:00~15:30분 / 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

○ **(목적)** EU의 신통상정책 주요 현안에 대해 **관계부처 및 산학연 전문가**가 참여하는 대책단을 구성, **정부 입장 수립 및 민관 합동 대응** 추진

○ **(구성안)** 우리부(단장 : 통상차관보), 관계부처 및 산학연 전문가 20여명

* (관계부처) 기재부·환경부·외교부 등 국장급, (민간) KOTRA, 대한상의, 무역협회, 업종별 협단체, 대외경제정책연구원, 산업연구원, 에너지경제연구원, 유럽학회 등

□ **진행(안)**

구 분		주 요 내 용	비 고
14:00~14:05	5′	ㅇ 개회 및 모두발언	산업부(본부장)
14:05~14:15	10′	ㅇ EU 통상현안 동향 공유	구주통상과
14:15~15:25	50′	ㅇ 안건 논의 - 기관별 검토의견 및 대응방안 - 종합토의	참석자
15:25~15:30	5′	ㅇ 마무리발언	산업부(본부장)

참고 2 EU 통상 주요법안 동향 및 대응계획

Ⅰ. EU 통상정책 방향

□ 現 EU집행위('19~'24년)는 '21.2 **EU 新통상정책 발표**

○ 과거 다자주의 복원, **일본·캐나다** 등 **거대 경제권과 FTA**를 통한 **교역·투자 자유화(Trade for all, '14~'19) 전략**을 추진했으나,

○ 미·중 갈등,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교란 등을 경험하며 **자유무역 기조는 유지**하되 **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전략 추진으로 선회**

□ EU 신통상정책 핵심 목표는 ❶**그린 및 디지털 전환**을 위한 **공급망 회복력 강화**, ❷**지속가능**하고 **공정**한 **글로벌 규범** 마련, ❸**EU 이익과 가치를 수호**하기 위한 **단호한 대응 역량 강화**

❶ **(공급망 회복력) 전략산업**(반도체, 배터리 등) **역내 생산기반 확충, EU 단일 시장 기능 유지, 對中의존 저감 및 공급망 다변화** 등

⇒ **원자재법·배터리·반도체법** 등 **제정 추진**

❷ **(지속가능성) 기후변화, 노동, 인권 등 보편적 가치**기준의 역내·역외 적용

⇒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**Fit for 55(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, 자동차 CO2 배출기준 개정 등), 에코 디자인, 공급망 실사 지침** 등 **제정 추진**

❸ **(단호한 대응) 제3국 조치**에 대한 **견제**를 통해 **공정경쟁환경 조성**

⇒ **역외보조금 규정, 통상위협 대응조치** 등 **제정 추진**

□ 美IRA를 계기로 **EU통상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가**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**그간 입법과정 모니터링 및 우리 입장 전달 등 지속 대응** 중

○ 한편, EU통상정책은 국내 기업에 리스크 뿐만 아니라 **선제적 대응에 따른 他국가 대비 경쟁력 확보 가능성 등 기회요인도 병존**

Ⅱ. EU 통상 주요법안 경과 및 주요내용

가. 탄소국경조정제도(CBAM)

□ **(논의경과)** EU측은 자국 內 **환경규제를 강화**하고 **탄소누출 방지**를 위해 **CBAM법안 발표**('21.7.14) 후 3자간 **CBAM 입법안 합의** ('22.12.18)

○ **(향후일정)** CBAM 최종법안 마련 후 **유럽의회/각료이사회 각각의 승인**을 거쳐 **관보 게시 후 발효** 예정('23.上 잠정)

* 탄소배출량 산정 등 세부 시행방안은 위임·이행법안을 통해 발표 예정(EU 집행위, '23.下 잠정)

□ **(주요내용)** EU 內 수입업자는 수출기업을 통해 수입품의 **탄소배출량**에 상응하는 **CBAM 인증서**를 **구매·제출할 의무** 부과

○ **(대상품목) 철강, 알루미늄, 시멘트, 비료, 전력, 수소** 등 6개 품목

○ **(시행시기)** 23.10.1부터 전환(준비)기간 개시, **'26.1.1부터 본격 시행**

* 전환기간 : 배출량 보고의무만 존재 → 본격시행 : CBAM 인증서 구매의무 발생

- CBAM 본격 시행시, 對EU 철강 수출액이 많고 생산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많은 **對EU 철강 수출**에 **주로 영향** 예상

⇒ 그간 정부는 CBAM에 대한 우리 우려*를 EU에 강하게 전달, EU측에 CBAM 입법과정에서 **지속적 협력 요청**

* ❶ WTO 규범에 합치, ❷ 한국 탄소가격 충분히 고려, ❸ 투명한 제도 설계·운영

□ **(대응계획)** 하위 **이행법안에 우리 입장을 반영하는 노력**을 지속하고, **탄소감축 기반조성**을 통해 **우리기업 제품**의 **EU內 탄소경쟁력 확보 지원**

○ **(부처협업)** 기존 관계부처 회의를 확대·개편한 **CBAM TF를 출범**(2.2)하여 **對EU 협의 전략** 및 **국내 산업계 지원 방안 논의**

○ **(기술개발) 핵심 탄소감축 기술개발·감축설비 보급** 및 **금융지원** 등 **저탄소 생산구조로의 전환**을 통해 **탄소규제를 기회**로 활용

*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(23~30년 2,097억원), 감축설비지원(23년 195억원), 녹색채권 3.9조원

나. 반도체법 (Chips Act)

□ **(논의경과)** '22.2월, EU집행위 '반도체법안(Chips Act)' 제안→'22.12월, EU이사회 입장 채택, '23.1월 유럽의회 입장 채택, 3자 협의 진행 중

□ **(주요내용) EU 역내 반도체 공급망 안정성 강화를 위한 지원수단**

○ **(반도체 이니셔티브) 설계역량 강화 및 파일럿라인 구축, 양자칩 개발지원, 인력양성 등 산업 생태계 육성 지원** (총 110억 유로 투입)

○ **(공급 안보) 지원대상 설비(통합생산설비, 개방형 파운드리)**의 요건을 정의하고, 해당 설비는 **EU 및 회원국으로부터 보조금 수혜** 가능

※ 위기대응 체계를 도입하여 위기상황 발령시, 통합생산시설·개방형 파운드리에게 정보 제공요구, 민감분야 생산 우선주문 등 가능

다. 배터리법 (Battery Regulation)

□ **(논의경과)** '20.12월 EU집행위 초안 공개 후, '23.1월 **EU집행위·유럽의회·이사회간 3자 협의** 완료, **2024년부터 단계적 시행 예정**

□ **(주요내용)** 지속가능한 배터리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**친환경성 강화 의무** 등 규정

○ **(탄소발자국) 배터리全주기 탄소배출량 측정의무**, 기준배출량 초과 시 '28년부터 EU내 판매제한

○ **(재생원료 사용)** 배터리 제조시, 사용후 배터리에서 회수된 핵심광물 등 **재생원료 일정량 이상 사용 의무** ('31년부터 시행)

○ **(공급망 실사) 원자재 추적시스템**과 리스크 관리계획 구축, 제3자 검증 및 결과 공개 ('25년부터 시행)

⇒ **업계에 부담으로 작용**할 수 있으나, **특정국가/기업 차별조항이 없고 2년 이상 유예기간 동안 면밀하게 준비 예정**

라. 핵심원자재법 (Critical Raw Material Act)

□ **(논의경과)** EU는 '08년 이후 **원자재 정책을 도입해왔으며, '22.9월 '유럽 핵심원자재법' 도입계획** 발표, **'23.1분기 내 법안 초안 발표 예정**

□ **(예상 주요내용)** 특정국 의존도 축소, 역내 투자 확대, 리스크 관리 체계 강화 등을 통해 **EU 역내 핵심원자재 공급 안정성 확보**

○ **(핵심원자재 선정) 전략적 핵심원자재 목록 선정,** 역량 확대 **목표 설정**

○ **(리스크 관리) 조기경보 시스템 개발, 공급망 스트레스테스트** 등 수행

○ **(공급망 강화)** EU 역내·외 **전략 프로젝트 식별, 자금·인허가 절차 지원, 공급망 개발 기금 조성** 등

○ **(공정경쟁 보장) 재활용 의무 설정, 탄소발자국 관련 정보 요구** 등을 통한 공정경쟁 보장, **전략적 비축 관련 협력** 확대

⇒ 아직 **법안 초안이 발표되지 않아 영향 분석에 한계**, 향후 법안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**우리 업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속 협의**

마. 자동차 CO2 배출기준 강화 (CO2 emission standards)

□ **(논의경과)** EU집행위는 '30년 탄소 배출량을 '90년 대비 55% 감축하기 위한 'Fit for 55'를 발표('21.7)하면서 **자동차 CO2 배출기준** 강화 제안

○ EU 집행위·이사회·유럽의회 3자 협의('22.11) 完→**'23.上 발표 예상**

□ **(주요내용)** 유럽 內 신규판매 차량의 **CO2 배출 감축 목표를 대폭 상향**

<'21년 수준 대비 CO2 배출량 감축목표>

- ('30년) 승용차 △37.5% → **△55%** / 밴(소형 상용차) △31% → **△50%**
- ('35년) 모든 신차에 대해 △100%, **사실상 '35년 이후 모든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**

⇒ 우리나라는 유럽 시장 內 **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를 계속 확대**해온 바 **단기적으로 영향이 크지 않을 것**으로 예상됨

바. 역외보조금 (Regulation on Foreign subsidies)

□ **(논의경과)** EU 집행위 제안('21.5) → 3자(집행위·유럽의회·이사회) 합의('22.7) → 법 발효('23.1) → **'23년 7월부터 적용**

* 적용대상 핵심기준인 경쟁 왜곡 판단, 비교형량 방법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未발표

□ **(주요내용)** 과도한 **역외보조금 수혜 기업**의 **EU 경쟁 왜곡 시정·방지**를 위한 **개별 조항**(기업결합·공공조달) 및 **일반조항**으로 구성

EU 역외보조금 규제(RFS) 구조

		적용 대상	제재 요건	제재 조치
개별조항	기업결합	(인수·피인수 중 1개라도 **EU內 설립시**) ❶EU內 **매출액 5억 유로↑** & ❷**역외보조금 3년간 5천만 유로↑**	**역외보조금 존재** + **EU 시장 왜곡** + **비교형량** (긍정영향<부정영향)	**기업결합 금지**
개별조항	공공조달	(EU外 기업이 **EU內 공공조달 참여시**) ❶**조달가액 2.5억 유로↑** & ❷**역외보조금 3년간 400만 유로↑**		**계약체결 금지**
일반조항 (직권조사)		EU 內 경쟁 왜곡 의심 **모든 경제행위**		**시정 조치** (투자 제한 등)

⇒ 향후 **이행법안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**하고, EU측과도 지속적으로 협의

사. 에코디자인 법안 (Ecodesign Regulation)

□ **(논의경과)** EU집행위는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내구성, 재활용 가능성 등을 요구하는 **에코디자인 지침 개정안*(Regulation) 제안('22.3)**

* 기존 에코디자인 지침(Directive)에서 규제 대상범위(에너지 관련 제품의 효율 → 전제품의 내구성, 재활용 등 순환가능성) 확대

□ **(주요내용) 에너지효율 및 자원효율(내구성, 수리 가능성, 재활용성, 재생원료 사용 등)**에 대한 적합성평가 실시 및 CE 마크 부착

* 품목별 세부 규정은 이행조치(Implementing Measure)를 통해 발표

⇒ **기업의 준수 범위가 늘어날 수 있는 것은 부담이나** 선제적 대응시 **해외 경쟁사 대비 경쟁우위 확보가 가능**

아. 공급망 실사 지침 (Due Diligence Directive)

□ **(논의경과) EU 집행위** 제안('22.2) → **EU 이사회** 입장 확정('22.12), 유럽의회 논의 중으로, 최종 확정 후 **2년 내 회원국별 법률로 제·개정** 예정

* 공급망 실사는 Directive(지침)으로 입안되어 최종확정 이후 회원국별 법률로 제·개정 예정

□ **(주요내용)** 기업에 **공급망 내 노동, 환경 침해에 대한 실사 의무 부여**

○ **(대상)** 그룹①EU內 **순매출액 1.5억 유로 초과,** 그룹②EU內 **순매출액 4천만 유로 초과** + 순매출액 50% 이상이 특정 업종에서 발생 기업

○ **(의무)** ①공급망 실사를 **기업 정책에 반영**, ②실질·잠재적 **영향 평가 및 예방·해결**, ③**모니터링 및 결과 공개** 등

○ **(책임) 실사 의무 불이행**時 **민사법원에 제소** 가능

⇒ **EU회원국별 법안 제정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**하고, 국내 기업의 **공급망 실사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** 추진

Ⅲ. 對EU 통상현안 대응방향

1 통상현안 대응체계 강화

□ **『EU통상현안대책단』 운영을 통한 체계적 대응**

○ **(구성)** EU 新통상정책의 **다양한 현안을 총괄적으로 분석하고 대응**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 **『EU통상현안대책단』** 구성

* (정부) 우리부(단장:통상차관보), 기재부, 환경부, 외교부 등 관계부처
(민간) KOTRA, 대한상의, 무역협회, 업종별 협단체, 대외경제정책연구원, 산업연구원 등

○ **(운영) 대책단 출범회의**('23.2.2, 통상교섭본부장 주재) 및 **현안별 간담회** 수시개최를 통해 **정부 입장 수립 및 세부 전략 마련**

⇒ 이슈별 ①**법안 제정동향**, ②**국내 영향**, ③**업계지원 필요사항** 등 논의

□ **실질적으로 우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對EU협의 추진**

○ 통상장관회의, 한-EU FTA 이행위원회 등을 통해 **고위급-실무급 협의를** 진행, EU에 **우리 정부 입장을 전달하고 부담 최소화** 추진

2 우리 기업 역량강화 지원

□ **통상현안 대응 정보제공 및 업계소통 확대**

○ 주요 경제단체 및 협단체와 공동으로 對**EU 통상현안 설명회 온-오프라인 수시 개최**

- 통상현안 주요내용, 국내 기업 영향, 업계 지원 필요사항 등 논의

□ **對EU 수출기업 지원사업 확대**

○ 국내 기업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**시범사업*, 탄소감축 R&D·설비 지원** 등 추진**

* 중소·중견기업 대상 공급망 실사 대응 현장 실사 컨설팅 시범사업('23~, 13억원)
**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(23~30년 2,097억원), 감축설비지원(23년 195억원)